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송신형, 유승현

요 약

■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과 경기를 부양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며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관련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여개 이상의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난립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음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 수출지원제도의 복잡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 등을 제시하였음

- 중진공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거나 중진공 자금지원 이후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여러 주체를 통해 수출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신청절차 및 보고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지원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 체계가 미약한 상황

■ 본 포커스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현황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순위 설정 및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I. 서론 : 문제의 제기

■ 2011년을 기준으로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323만 4,687개 가운데 중소기업이 99.9%(323만 1,634개)를 차지하고 있어 영국(99.9%), 일본(99.0%), 대만(97.6%), 미국(99.7%)¹⁾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종사자수 비중은 한국(86.9%)이 일본(76.1%), 대만(77.9%)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표 1] 중소기업 현황정보(1인 이상 전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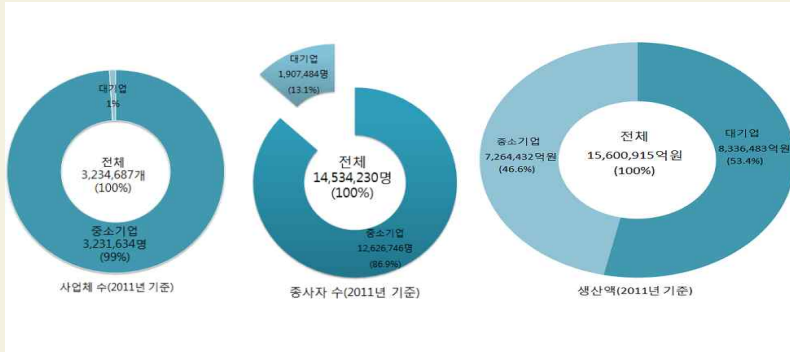
(단위 : 개, 명, %)

		2008	2009	2010	2011
사업체수	전체	3,046,958	3,069,400	3,125,457	3,234,687
	중소기업	3,044,169	3,066,484	3,122,332	3,231,634
	(비중)	99.9	99.9	99.9	99.9
	대기업	2,789	2,916	3,125	3,053
	(비중)	0.1	0.1	0.1	0.1
종사자수	전체	13,070,424	13,398,497	14,135,234	14,534,230
	중소기업	11,467,713	11,751,022	12,262,535	12,626,746
	(비중)	87.7	87.7	86.8	86.9
	대기업	1,602,711	1,647,475	1,872,699	1,907,484
	(비중)	12.3	12.3	13.2	13.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3.5 중소기업 위상지표)

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중소기업통계』(미국은 2010년, 한국, 대만, 독일, 영국은 2011년, 일본은 2009년을 기준)

[그림 1]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13.5 중소기업 위상지표)

■ 중소기업은 고용과 경기를 지탱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며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성장 동력임.

- 산업구조가 고도화, 다양화되면서 다품종·소량 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대기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
- 현재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의 50.6%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음. 특히, 부품·소재 관련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98.9%를 차지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이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할 수 있음.(2009년. 기준²⁾)
- 한편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범주 안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KDI(2005) 보고서³⁾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0.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견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조 재정립에 관한 연구(2010. 성균관대학교)

3) 김주훈 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온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에 대한 기능 중복⁴⁾ 및 업무의 비효율성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여개 이상의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난립⁵⁾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간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기능중복 문제 뿐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각 시도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실정임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 한편으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퍼주기 식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본 포커스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또한 향후 중점을 뒤야 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및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함

4) A기업은 2010년 3개 부처, 5개 사업을 통해 매출의 50%가 넘는 3.8억원 수혜

5) 14개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13조원 규모**의 **1,301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미비

II. 기존 선행연구 분석

정용우, 김판진(2010)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원기관의 중복과 절차의 복잡성, 간접금융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부 시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기영, 조영삼(2011)의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체제와 성과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On-lending) 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 정부의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이 과다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책금융지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의 경우, 시장금융과의 경합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현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On-lending 대출제도는 특성상 은행 적격업체를 중심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는만큼 은행들이 대출에 소극적인 기업군으로 대출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

한국정책학회(2007) 보고서⁶⁾에서는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살

펴보고, 어떤 성과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소기업청의 향후 기능 및 조직에 대한 재설계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음

-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문제점으로 중소기업 서비스의 중복적 시행, 중소기업 지원기능의 다원화의 필요성,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의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복구조가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오철호 외(2012)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급증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의 정책 진행방향을 탐색하려고 하였음. 중소기업 정책의 추진방향, 추진주체(주관주체, 지원주체, 협조주체, 참여주체), 이들의 역할(기능)규명 및 네트워크화, 정책 실현방향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시기별 변화과정을 통해 현 지원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청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능별 평가결과를 살펴보았음.

- 가장 효과적인 정책들로는 단체수의 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중소기업 판로 지원정책(37.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창업기업 지원(22.2%), R&D지원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14.8%)으로 나타남

정지호·이병현(2005)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① 자금 및 창업지원 ② 기술지원 ③ 영업 및 마케팅 지원 ④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⑤ 정보화사업 ⑥ 인력지원 ⑦ 외부연계 및 기업간 협력 등으로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목표 정책기획 및 집행과정을 분석하였음.

- 영업 및 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몇몇 사례를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음

6)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지원행정 효율화 방안, 한국정책학회, 2007

III.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현황

1. 현행 중소기업 지원체계 분석

- 현재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15개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 및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 포함)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 중소기업지원체계 현황



■ [그림 2]의 중소기업 지원주체들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정부부처의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 무역, 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지식경제 및 산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인 업무로는 지식경제기반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정책의 수립, 추진 등 지식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관련 행정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음.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며 동시에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책자금지원, 신용보증, 중소기업매출, 채권보험, 인력지원, 벤처기업 지원, 기술혁신 지원, 정보화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여성기업 지원, 장애인 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지원 등으로 분류됨

-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산하)은 큰 흐름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체로 벤처지원, 창업기반조성, 기술혁신 지원 등으로 구분된 기능을 수행함

- 이러한 기능의 특성은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간 업무 협의 및 조정, 중소기업 제품의 시험 및 분석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지역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2008 중소기업청)

나. 지자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 : 지역의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자금 지원 및 각종 기술, 인력, 교육 등 지원기능을 하고 있음.

-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입지 등 인프라 위주로 지원, 지역여건에 맞는 관련정책의 개발과 추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및 테크노파크의 운영 등을 수행함

- 또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하거나 중소기업청과 공동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실행 또는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청이 세우고 세부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가 독자적으로 세위 실행하기도 하는 구조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 외에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사업도 추진하는 구조를 가진

-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 평역자치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유관기관인 지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 지식재산센터, KOTRA 지역무역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
-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산업입지제공 및 기업유치활동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기업지원, 유망중소기업 육성,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산업인력지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 창업 교육 및 기술개발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다.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 : 중소기업 지원을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두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있음

- 설립목적에 따라 지원분야/기능별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주무부처가 수립한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들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시책에 따라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정부 위탁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등 4개자금을 통합 •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을 2008년부터 운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 • 벤처창업과 소상공인 융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모태 조합출자사업으로 안정

적인 벤처투자재원 조성을 지원하며 구조조정지원사업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회생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회복을 유도하고 있음

- 단체 및 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등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지방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단체보험사업 추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시행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인프라 확충, 무역관련 교육 연수 및 조사연구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로 수출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을 퇴직한 인력을 중소, 중견기업에 알선하는 재취업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4] 중소기업 지원주체 및 역할

지원주체	역할	지원분야	
중앙정부 (총 14개)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 및 산업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립 및 집행	수출입, 해외투자, 연구개발, 유통산업, 산업구조고도화,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전반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산자부 정책기능 이관 수행)	중소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기능+ 조정 기능	중소기업 지원관련 모든 기능 담당 :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지식서비스, 교육, 판로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기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기능 수행	중소기업 지원관련 모든 기능 담당 :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지식서비스, 교육, 판로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기타
	정부 각부처(12개) :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특허청, 방위사업청, 관세청, 식약청, 문화체육관광부	중기청이 전체의 사업의 40%, 예산의 61%를 차지하며, 다른 부처는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관련 모든 기능 담당 :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지식서비스, 교육, 판로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지방자체재원을 바탕으로 지역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수행 - 지자체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신용보	산업입지제공/ 기업유지활동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 기업지원/ 유망중소기업 육성/ 해외 마케팅 및 수출지원/ 산업인력지원/ 지역 전략산업 육

		중기금이 설치되어 자금 및 기술, 인력, 교육 등을 지원	성, 창업교육 및 기술개발관련 사업 등을 수행
중소기업 유관기관	공공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운데 정부 위탁업무가 주된 기능	중소기업 지원관련 모든 기능 담당 : 자금, 인력, 기술, 창업, 지식서비스, 교육, 판로지원,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기타
	공공기관(15개) :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보완적 역할 수행 - 설립목적에 따라 분야별/기능별 중소기업지원 담당 - 주무부처의 정책수립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집행기능 담당	중소기업 기능별 지원 : 판로지원, 기술, 수출, 자금, 창업,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교육,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기타
	민간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 회원기관 중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 기능별/분야별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기능별 지원

2.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가.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12개 각 부처, 중소기업청(지방중소기업청 포함)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사실상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의 비중이 30% 이상인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13개 중앙부처의 203개 사업(10조 867억원), 16개 지자체의 920개 사업(2조 21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⁷⁾

[표 5] 중소기업 지원정책 규모

구 분	2012년도	
	중소기업 관련예산	사업수
합계	122,979억원	1,123개
중앙	100,867억원	203개
지자체	22,112억원	920개

■ 현재 지자체나 중앙부처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분야는 자금, 인력, 해외판로, 교육, 청년인턴제도 등 다양함. 중앙부처의 경우, 기술개발과 인력 지원의 비중이 높고, 지자체의 경우는 자금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의 비중이 높음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정책은 지원 대상에 대한 정부의 조정 기능이 없어 실제로 몇 개 인지 모호하며, 세부사업이 다르지만 사업 내용과 목적이 유사한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창업체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경상남도(경영안정자금), 창원시(중기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기업구매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수출금융) 경남본부 등이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판로지원의 경우, 경상남도(국제박람회, 중기제품 수출지원), 창원시(수출마케팅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무역협회 경남본부, 경남테크노파크, 코트라 등이 나서고 있지만 지원하는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비슷해서 통합이나 차별화된 지원책이 요구되는 상황

• 청년인턴제도도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운영기관만 달리 지정해 시행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창원문성대학교와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경남경총 등 4개 기관을, 경남도는 1개 기관을 선정, 인턴에게 6개월간 매달 인건비로 80만~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부록 1] 별첨 참고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을 기관의 주된 기능으로 두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벤처투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이 있음

■ [표 5]에서 예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보면, 금융지원, 판로지원(수출판로지원, 국내지원), 인력, 컨설팅, 기술, 창업지원, 정보화지원, 세제혜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별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및 안정화, 기술개발 촉진,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관련단체 및 협회의 지원프로그램 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회원기관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능별/분야별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국내외 판로개척, 협동조합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지방 중기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중소기업지원의 각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 및 자료의 간행,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 정부 수입업무, 상담, 거래알선 및 대행업무, 통상협력 및 홍보, 무역센터 운영, 기타 무역진흥에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7만여개 수출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주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자금지원보다는 비즈니스 멘토링, 경영닥터제, 중소기업 종합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지원기능과 중장년 채용지

7) 2012년도 중기지원사업 분석 및 평가, KOSBI

원사업 등 인력지원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IV.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정책금융 지원제도 및 대상의 중복

가. 다원화된 지원체제로 인한 자금지원 중복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은 한국은행, 지자체, 신용보증기관, 국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동일 중소기업이 중복 수혜를 받거나, 지원목적과 괴리된 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정책금융공사, (주)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이며, 이외에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및 각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중진공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됐으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체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정책자금 용자, 자본지출 사업, 경상지출의 용도로 사용
-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을 중심으로 각종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2010년 말 현재 전체 38조 7810억 원의 자금 중 99.93%의 비율인 38조 7810억 원을 중소기업에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제공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되었는데 짧은 역사에도 2009년 말 현재 17.1448조 원의 보증 지원 실적을 보임.
-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간접대출(전대), 위험분담, 간접투자(모태펀드) 등의 사업을 영위

- 모태펀드는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된 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로서 2009년 말 현재 1.1203조 원을 중소기업투자펀드에 출자(약정액 기준)하고 있음.

- 한국은행의 경우, 총액한도대출과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의 경우 산하기관이나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정책자금 용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정책자금 출자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해당부처가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이를 모태펀드가 투자조합에 다시 출자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해당 기관이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조영삼, 2008 산업연구원)

■ 실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분석 및 차별화방안 연구(2012)에 따르면, 중진공의 정책자금신청 이후 추가적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업체의 62.8%가 추가적인 지원경험을 응답했으며, 자금지원 선정업체와 탈락업체 간의 차이는 중복지원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이민호(2008)의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전체 31,374개 업체 가운데 31.6%가 2회 이상의 중복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중진공 외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까지 확장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서의 상당한 중복지원 가능성을 지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166개) 가운데, 금융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76개로 46%에 해당하며, 유형별 지원프로그램의 비중은 해외마케팅(20%), 기술지원(12%), 컨설팅(7.3%), 인력지원(5.4%), 정보화지원(4.2%), 창업지원(1.8%) 순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거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⁸⁾에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정책(37%), 창업지원(22.2%), R&D지원(14.8%) 등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

8) 『중소기업 정책 50년사와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 중소기업 관련 평가위원, 연구원, 산하기관 임원 등 중소기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2.10.31.부터 약 12일간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정책자금 지원(7.4%)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선호할 것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제기

나. 보증기관간 업무 중복성

- 신용보증은 담보력(신용등급)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지만, 채무불이행 위험을 신용보증을 통해 보강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력 등이 있어도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을 육성하는 역할을 함
- 우리나라의 공적 신용보증은 대상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기금)의 2012년 전체 보증공급 규모가 96.3조원(보증잔액기준으로 125.6조)임
- 2012년 기준으로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과 4,977개 기업에 2조 792억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수의 업체에 1조 5,778억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음. 이는 각 기금의 전체 보증잔액의 5.3%와 8.9%에 이르는 규모임.
- 중복보증을 여러 보증기금을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며, 이러한 중복보증이 많게 되면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고액보증이 될 우려가 있음

2. 수출지원제도의 복잡성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저변이 얇고 수출증가율도 낮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서 정체되고 수출 100만불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한 상황
- 해외시장은 국내와 언어, 통화, 거래문화, 법률적/제도적 환경 등이 국내와 크게 다른 데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정보 등 보유자원과 사업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높은 실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관련된 기관은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중소기업 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 예산으로 지원정책을 집행하고 있음. 이들 기관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들의 수도 2012년의 경우 무려 189개⁹⁾에 육박함.

- 공공기관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수출) 단계별로 40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상황

■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수출준비단계(60건) 및 해외진출단계(10건)보다는 해외마케팅 등 수출수행단계(119건)에 집중되어 있음

- 구체적 단계별로는 해외마케팅이 79건으로 가장 많고, 무역교육/ 컨설팅과 해외시장 접근지원이 각각 22건으로 다음으로 많은 수준. 수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개선이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법인 및 지사설립(4건) 등 단계는 지원시책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
- (사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의 수출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중복적인 지원이 발생하고 있음

9)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63호(2013.6.3)

[표 8] 지원기관 및 절차별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

구 분	중소기업 진흥공단	KOTRA	유관기관 (공공기관 포함)	지자체 (시/도)	합계
무역교육 및 컨설팅	1		4	17	22
수출품 품질제고	1			6	7
정 보 제 공 및 판매인 프라 구축	2	2	3	6	13
수출절차 및 인증	1		2	15	18
해외마케팅	2	3	6	68	79
해외시장 접근		2	1	19	22
수출금융 및 보험	1		3	14	18
해외법인 및 지사설립	2	1	1		4
기타			2	4	6
합계	10	8	22	149	189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가 수행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수출준비단계(수출역량강화사업 등) 및 해외진출단계(수출인큐베이터 및 해외민간 네트워크 등)에 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KOTRA는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비즈니스 출장지원 및 해외지사화사업 등 수출수행단계(해외마케팅)에 집중되어 있음
-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이외에 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기관들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무역교육 및 연수, 바이어 및 해외무역정보 제공(한국무역협회),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¹⁰⁾(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집중되어 있음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등)는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자체적인 사업 및 예산을 확보하여 각각 8~28개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들을 시행 중
 - 이 중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통상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참가지원은 16개 지자체 모든 곳에서 시행 중인 사업이며,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 온라인 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지사화 및 수출기업화사업 등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
 - 2012년 예산기준으로 중앙정부(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204개 사업에 100,740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등 광역지자체는 920개 사업에 22,110억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2월 지식경제부 등이 개최한 중소기업 수출애로해소 간담회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수준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수출 지원사업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상당하였음
- 현행 해외진출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밝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원정책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30.7%, 93개사)과 신청절차 및 보고사항 등이 너무 복잡함(29.4%, 89개사)을 꼽을 수 있으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17.5%, 53개사)¹¹⁾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2008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
-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잡·다양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단순하게 정리하고자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발표하였음
- 특히 기관간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 및 인력낭비,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혼란에 주목하여 중소기업 수출과 관련된 국내 업무와 해외업무를 각각 중진공과 코트라에 전담하도록 이원화하였음. 이에 따라 코트라는 국내 11개 무역관을 모두 폐쇄하고 대신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 17곳을 넘겨받았음

10)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은 대부분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위탁사업임
 11) 중소기업진흥공단 DB기업들 중 303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2012.5)

최근 박근혜 정부는 국내와 해외로 이원화되었던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다양한 기관의 중복·경쟁체계로 되돌리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수출지원체계의 복잡성을 다시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코트라는 해외수출인큐베이터 17곳중 6곳을 증진공에 되돌려 주기로 하였으며 국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청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관련기관에서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였음

앞에서 열거한 관련기관들은 각각 고유한 설립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의 중소기업수출지원사업들은 이러한 고유한 설립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일부에 해당됨.

3.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 : 특화된 지원정책 미비로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 부족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과 정책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인들의 정책만족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 이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하드웨어(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수요자중심의 지원체계)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공급자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당위성에 끌려 각 부처/기관마다 소관업무에 근거해 중소기업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지원의 주체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정책운용에 중복적인 문제가 있음
- 자금, 기술, 인력 등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만 주력함으로써 정작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부족
- 기관별로 구축된 홈페이지는 정책정보가 미흡하면서도 유사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정책 정보가 특화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이 정책정보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업데이트를 통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나, 정책발표시기, 해당정보의 단순한 수집제공으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금의 소진, 지원시기의 경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

2010년 고성장 중소기업 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를 4단계로 구분할 때 단계별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남.

- 창업기에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자금, 국내판로, 인력, 해외판로, CEO의 리더십향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장기에는 인력, 자금, 국내판로, R&D, 해외판로, 리더십향상, 경영컨설팅 순으로 나타남.
- 정제기에는 자금과 R&D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판로, 인력, 국내판로, 리더십향상, 경영컨설팅 순으로 뒤를 잇고 있음
- 재도약기에는 R&D와 인력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며, 다음으로는 해외판로, 자금, 리더십향상, 경영컨설팅, 국내판로 순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가 다르며, 수요자(중소기업)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9]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조사 결과(%)

	자금	국내 판로	인력	R&D	해외 판로	리더십 향상	경영 컨설팅
창업기 (1~5년)	50.0	29.4	11.8	0.0	5.9	2.9	-
성장기 (6~9년)	22.4	17.9	26.9	11.9	11.9	6.0	3.0
정제기 (10~19년)	23.0	8.0	13.0	23.0	19.0	7.0	7.0
재도약기 (20년이상)	13.8	4.6	20.0	29.2	15.4	9.2	7.8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2010), 『중소기업 성공모델에 관한 실증연구』)

4.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87.9%(275만개), 종사자의 37.7%(533만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간 신규 일자리 321만개 중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도 중요

[표 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사업체	3,125,457	2,748,808	87.9	3,002,333	96.1	119,999	3.8	3,122,332	99.9
종사자	14,135,234	5,333,561	37.7	8,056,436	57.0	4,206,099	29.8	12,262,535	86.8

* 소상공인: 제조업·광업·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5인 미만)

- || 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다
 -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28.8%)가 OECD평균(15.9%)보다 1.8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멕시코,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일본, 독일, 미국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
- || 최근에는 유류제정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내수 침체 우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 등 경영여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 가운데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

[표 11] 지원대상별 지원시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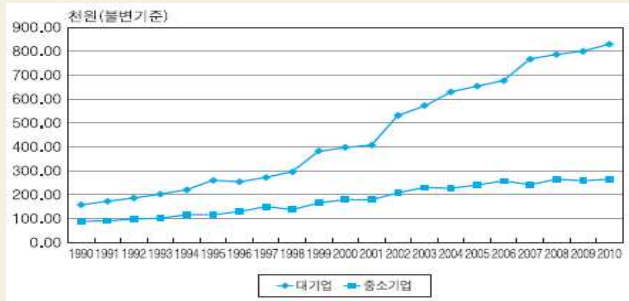
	창업 벤처	기술	인력	자금	수출 판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기타	합계
제조업	5	36	3	22	15		16	97
서비스		4		9	5		15	33
소상공인				1		8		9
기타	5	3	18	7	7		22	62
합계	10(5.0)	43(21.4)	21(10.4)	39(19.4)	27(13.4)	8(4.0)	53(26.4)	201

(자료 : 중소기업청(2011), 『2010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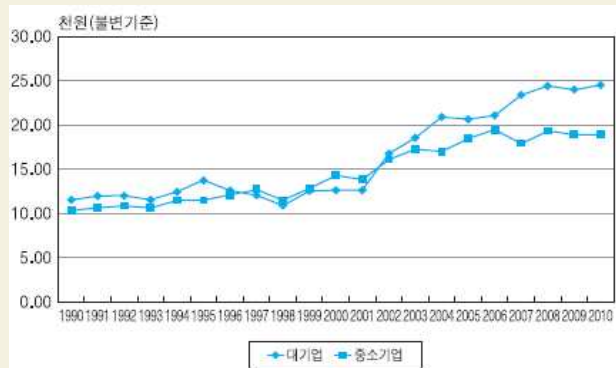
5.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위주의 지원정책

- ||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동안 정책적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으며,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뒷받침함
 - 현행 헌법 제123조 3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 헌법의 기본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1966년에 제정되고 1995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 ||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제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지원위주의 보호정책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저변은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중소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 최근 중소기업 부문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생산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대기업 - 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함.
 -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전체 노동생산성(노동 1단위당 부가가치)은 1990년 이후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의 대 중소기업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대중소기업의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은 모두 199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4] 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제조업 전체)



[그림 5] 대 중소기업의 중요요소생산성 추이(제조업 전체)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과 시장의 기초체력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시혜적 배분정책에 가까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책역량으로는 미래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V.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효율화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정책이 지원기관간 중복되고, 동일한 중소기업에 반복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향후 산업은행 흡수 통합), 한국벤처투자 및 기타 자금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포함하여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금융지원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획서가 타당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성있는 경영컨설턴트나 기술지도를 자금지원과 연계하여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개별기업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연계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중소기업에게 유사자금이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개별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융자, 출연 등)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 **중진공 정책자금은 직접대출과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험기피 성향이 있는 민간금융기관의 대출행태는 경기순응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하게 됨**

● **즉 자금수요가 더 많아지는 경기침체기에 오히려 시중은행들은 대출에 수반되는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를 비롯한 채권보존 조치를 하고 대출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금융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부진해지므로 중진공은 신속한 직접대출을 확대하여 자금경색에 빠진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경기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융자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의 정책금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지출의 규모도 함께 줄일 수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성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실적이 취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용평가에 기반을 둔 직접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보와 신보의 현재제를 유지하되 두 기금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조정하여 중복보증 및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방식에 대해 일반보증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기술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은 고도의 평가기법과 노하우의 축적이 요구되는 금융의 또 다른 전문 분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기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보와 기보의 통합보다 양 기금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조정하고 각 기관이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중복보증으로 인한 재정 낭비와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2. 수출 지원제도의 재정립

▮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 및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유관기관, 정부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시행 중

▮ 현재 복잡·다기화되어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해외시장의 개척 동기에 부합하도록 체계화하고 기능의 조정 및 통폐합이 필요

- KOTRA와 중진공의 두 기관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하여 서로 경쟁체제 하에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되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고 정보 및 인력 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으로 초점을 옮겨야 함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만을 독려하는 정책의 초점을 바꾸어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공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과 자료수집이 시급함.

-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의 수, 투자규모 등의 외적인 양상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환수분 등을 고려하여 내실을 파악해야 함

▮ 지원기관들 간의 기능 및 역할조정을 통해 지원업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지원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 기관별 유사 중복문제는 각 기관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사업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해외정보를 다량 구축하고 있는 KOTRA와 국내 정보에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무역협회를 연계하여 양 기관의 정보공유 후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구축 및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

▮ 수출기업이 어떤 성장단계에서 어떤 기관에 접촉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

▮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원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기관의 중복 및 복잡성으로 인해 수요자(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청절차와 방식을 좀 더 간소화하고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경로를 단 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기(1~5년), 성장기(6~9년), 정체기(10~19년), 재도약기(20년이상)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창업기 핵심정책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생존률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자금지원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창업지원의 경우, 창업컨설팅, 입지지원,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창업비용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성장기 핵심정책은 본격적인 생산성 둔화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 및 총요소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연계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인력고도화의 경우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강화(고용노동부와 연계 추진), 영업관리 인력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자금지원의 경우, 공장 및 설비자동화를 위한 설비자금,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 중진공 자금 지원 등을 연계하고, 공공구매, 마케팅/홍보지원, 수출초기지원 등 판로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시장진입 안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생산성 둔화를 조기에 차단해야 할 것임
- 정체가 핵심정책은 정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새로운 수익원 발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 재편, 유희설비 매각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임. 포화상태의 국내 시장을 탈피하여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현지진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
- 제도약기 핵심정책은 예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M&A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안정적 지위 및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위를 졸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

[표 12]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결과

구 분	창업기 (1~5년)	성장기 (6~9년)	정체기 (10~20년)	제도약기 (20년 이후)
기본방향	준비된 창업지원을 통한 성공률 제고	원활한 국내외 시장진입 지원	정체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확충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
구간생존율(%)	77	47	19	5
주요지원정책	창업, 세제, 자금지원	R&D, 인력고도화, 판로지원, 컨설팅지원	R&D지원, 해외마케팅, 사업전환 등	기업확장, 글로벌화, 졸업기업지원
자금 용도	창업	시설투자, 판로 및 인력확보	생산시설 확충, R&D 비용, 운전자금	사업확장, 구조조정
주요 자금원	중진공, 기보	신보, 은행	은행, 직접금융	직접금융
인력수요	생산인력	생산, 연구인력	생산, 연구인력	연구인력
판로	공공구매	공공구매	국내/해외	해외
수출	해외시장 정보획득	수출 초기지원	브랜드개발 마케팅 지원	현지진출

자료 :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예전과 같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특정사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를 나타내고 있음¹²⁾
- 최근의 중소기업 지원수요는 단순히 자금/인력/기술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 통폐합보다는 각 기관별 전문화 + 협업을 통해 복합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12)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관한 연구

4.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 강화

■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시장경영진흥원 및 소상공인진흥원이 있으나, 이들 기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역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한 형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이 추진되며, 2014년 1월에 출범할 예정. 통합하는 두 기관은 고유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 등의 유사 업무의 경우 통합해 운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면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이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확대·전환될 예정이며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교육, 인적자원, 상권 확보, 가격전략, 수요창출, 사업장 입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정책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자생하려는 의지가 강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촉진시키는 간접지원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5. 보호주의적 지원정책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 : 졸업제 및 일몰제 도입

■ 기업규모의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수는 정체된 상황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이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므로, 장기적 정책수혜를 방지하는 졸업제와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됨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신규로 도입할 경우, 지원기간(졸업제)과 지원조건(일몰제)을 명시하여 중복지원 및 장기간 수혜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1.11 정부는 창업 후 10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재정지원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억제해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활력을 기르고, 과도한 재정지원 의존도를 억제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 뒤 사업을 축소·폐지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소기업의 지나친 정부정책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위의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비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퇴출의 유도 등 정책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VI. 결론 및 시사점

■ 정책금융기관간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잡한 수출지원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KOITRA와 중진공을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 하여 두 기관간 경쟁체제 하에 정보 및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중복기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중진공의 직접대출 및 이차보전 방식을 통한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의 부담과 재정지출 규모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보와 기보의 통합보다는 현 체제 유지를 통해 신보는 일반보증, 기보는 혁신형, 기술중심형, 창업벤처기업의 초창기 기술평가 보증으로 분리하여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것인 만큼 졸업제 및 일몰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정책 의존도를 줄이고 보호주의적 지원정책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2014년 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출범으로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앞서 제시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 협회 및 단체 등과 공공기관에서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간소화·합리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정책금융과 수출지원제도의 중복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주무부처별, 기관별 정책금융, 수출지원정책 DB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둘째, 최근의 중소기업 지원수요는 단순히 자금/인력/기술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통폐합보다는 지속적으로 기관별 전문화 및 협업을 통해 복합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셋째, 지원정책의 사업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수출지원, R&D, 정책자금 지원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 지원정책이 목표로 하는 요소를 지표화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능에 대한 평가가 획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의 세분화를 선결과제로 설정해야 함
- 정책자금 지원의 경우, 중진공 내에서도 창업지원자금, 기술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기능이 있으므로 평가지표 역시 창업실적, 기술사업화실적 등으로 나누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문헌 】

- 정용우, 김관진, 「국내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8-1, 2010.6
- 이화실 외, 「중소기업 지원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예산정책보고서 4호, 2009.9
- 오철호 외, 「중소기업 정책 50년사와 중소기업 정책의 미래」, 한국정책학회, 2012.12
- 이기영, 조영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표, 2011.5
- 김주훈,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2005.12
- 박형준 외,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조 재정립에 관한 연구」, 2010.12
- 한국정책학회,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분석 및 지원행정 효율화 방안」, 2007
- 이병현, 장지호,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 기술혁신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5
- 김세종, 홍운선, 「중소기업 성공모델에 관한 실증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0.11
- 전은경,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63호, 2013.6
- 김종일,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동국대학교, 2013.1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2012.7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12.8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3.1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중소기업지원제도」, 2013.4
- 중소기업중앙회, 「2013 중소기업 위상지표」, 2013.5
- 지식경제부, 「2012년도 무역·통상진흥 종합시책」, 2012.3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www/wwwMain/main.do>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kr/index.do>
-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 중소기업유통센터 <http://www.sbdc.c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정책금융공사 <http://www.kofc.or.kr/kofc/index.jsp>
- 신용보증기금 <http://www.kodit.co.kr/index.jsp>
-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index.asp?go=1>
-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kr/index.jsp>
-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ksure.or.kr/index.jsp>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http://www.icredit.or.kr/koregweb/user/index/ViewIndex.action?mi=0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kh/main/KHMUI010M.html>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 한국벤처투자 <http://www.k-vic.co.kr/index.do>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 창업진흥원 <http://www.kised.or.kr/new/main/index.asp>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site/main/index/index001.jsp>
- 소상공인진흥원 <http://www.seda.or.kr/>
- 시장경영진흥원 <http://www.sijang.or.kr/market.do>

별첨 1.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2013.10)

* 중소기업청(137개)

금융(15)	1.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2. 창업기업지원자금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4. 신성장기반자금 5. 긴급경영안정자금 6. 사업전환자금 7. 투융자복합금융자금 8. 소상공인지원자금	9. 매출채권보험제도 안내 10.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11. 중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12.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13. 서민지원 햇살론 사업안내 1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15. 청년 전용 창업 특례보증
인력(9)	1. 북한 이탈주민 취업지원 2.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 3.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4.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사업 5. 산업기능요원제도안내	6. 외국전문인력 도입 지원사업 7.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8.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9. 중소기업 계약학과(주말·야간 학위과정)
창업/벤처(33)	1. 중소기업 회생건설사업 2.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사업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제도 4.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5. 창업 맞춤형 사업 6.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7. 창업투자조합결성승인 및 관리 8.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9. 창업투자회사등록 관리 10.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지원 11. 유희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12.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1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14. 벤처기업확인제도 15. 협동화사업지원제도 16.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17.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 지원제도 18.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투자화 인서발급 19. 모태펀드투자관리 20.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21.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22. BI 경쟁력 강화 사업 23. 창업아카데미 24. 창업대학원 운영지원 25.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26. 창업보육센터 지원

	27. 사업전환 지원사업 28. 대한민국 벤처 창업대전 29.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30. 실패 기업인 재창업자금지원	3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32. 시니어 창업지원 33. 중소·벤처기업 문화경영 활성화사업
기술/R&D(18)	1.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5. 중소기업 R&D기회역량혁신사업 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7.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8.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9.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10.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	원사업 11.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12.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 13. 의료기기 비교입상, 품질성능 비교평가 14.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15. 공산품 시험·분석 및 계량·계측기기 교정 16. 시험연구장비 무료이용개방 17.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18. 뿌리기업 육성 사업
판로/수출(19)	1.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운영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3.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4.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5.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6.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7. 중소기업모성자재납품업 종합지원센터 8.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 9. 공예산업지원(대한민국공예품대전)	1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1.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12.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13.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14.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사업 15.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6. 수출금융 지원사업 17.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18.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19.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전통시장/소상공인(19)	1.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소기업 종합지원계획 3.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4. 상권정보시스템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6.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7.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8. 소상공인대학 경영학교 e-러닝	교육 9.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창업교육) 10.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11. 소상공인대학 경영학교(경영개선 교육) 12.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지원 13.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14.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15.소상공인 협업화 사업 16.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	17.[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8.[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 19.중소기업사업조정
1인 창조기업/컨설팅 (7)	1. 스마트 앱 개발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2.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 3.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4.1인창조기업마케팅. 5.1인 창조기업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6.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7.지도사 자격증 관리 및 운영
여성/장애인 (3)	1. 여성기업확인 절차 안내 2.여성기업 육성	3.장애인기업 육성
정보화/기타 (17)	1.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2.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3.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 4.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사업 5.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6.공동네트워크화 지원사업 7.모바일오피스구축지원사업 8.정보화교육사업	9.IT전문인력지원사업 10.기술보호상당 11.기술자료임치 12.기술지킴서비스 13.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14.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15.가업승계지원 16.[기타] 2013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7.[기타]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 중소기업 진흥공단(40개)**

정책자금 (12)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 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투융자복합금융 지원사업, 소상공인특화자금, 중소기업
컨설팅 기술지원 (7)	중소기업건강진단사업, 컨설팅지원(공정혁신, 해외전문가, 기술인력 Pool 검색), 신제품개발지원, 녹색성장지원, 외국전문 인력 도입, 지역특화선도기업, 자전거해양태저장비 기술개발지원
해외마케팅 (16)	해외마케팅(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비즈니스출장,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글로벌중소기업 육성사업, 온라인수출지원사업, FTA수출컨설팅), 해외산업협력사업(국제기술협력, 해외진출·현지화지원, 기업간국제협력,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연수(2)	연수사업, 증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기타(3)	M&A 지원사업, 산업정보제공, 이업종교류

*** 중소기업유통센터(7개)**

마케팅(7)	백화점사업, HIT500(정책매장), 오프라인지원사업(인천공항면세점, 인천항, 부산역사, 휴먼쇼펩), 온라인지원사업, 마케팅지원(중소기업AS플랫폼, 홍보전시, 구매상담회, 여성기업관, 홈쇼핑지원사업, MRO지원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4개)**

R&D 지원 (12)	01. R&D기획 지원 사업 02. 과제발굴연구회 03.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04. 창업성장 기술개발 05.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06.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07.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08. 중소기업 업종공동 기술개발	09.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10. 취업연계 R&D 교육지원사업 11.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12.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정보화지원 (7)	01. 생산현장디지털화 02.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 03. 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사업 04. 기술보호상당	05.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06. 정보화 경영체제(IMS) 인증 07.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 조사연구
경영혁신지원 (1)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기술인재양성 (4)	0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02. 기술사관 육성	03.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04.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고 육성

*** 정책금융공사(4개)**

금융(4)	온랜딩 대출, 간접투자, KOFC 프론티어챌프, 녹색·신성장동력산업육성
-------	---

*** 신용보증기금(32개)**

금융(27)	기업일반자금보증, 혁신형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구매자금용 보증, 네트워크론보증, 무역보증, 일반시설자금보증, 임차자금보증,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선박금융 시설자금, 이행보증, 담보어음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IT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고령친화기업 섬김보증, 나들가게 다정다감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지식재산 창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 SOC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신보스타100
창업(3)	창업지원종합시스템, 창업기업컨설팅, 희망창업아카데미,
경영지원(2)	경영지원업무, 경영컨설팅

*** 기술보증기금(29개)**

금융(19)	정책자금 One-stop지원, 유관기관 협약지원, 전자상거래, 구매자금용, 네트워크론, 무역금융,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기타상품,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예비 스타벤처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R&D 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
기술평가(5)	기술가치평가,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녹색인증평가, 기타 기술평가사업
컨설팅(2)	기술 경영컨설팅, 창업멘토링
기술지원(3)	기술이전보증, 기술인수보증, R&D보증

*** 수출입은행(6개)**

금융(6)	수출금융, 수입금융, 해외투자금융, 단기무역금융, 보증(이행성보증, 채무보증, 이자율지지), 은행간 수출신용(전대자금대출, 투스텝복합금융, 신용장확인)
-------	--

*** 한국무역보험공사(9개)**

금융(8)	단기성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신용보증, 기타보험(탄소종합보험, 녹색산업종합보험, 부품소개 신뢰성보험), 투자위험보증사업,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신용조사(1)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KOTRA(21개)**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진출(18)	Export Gateway, 지사화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무역사절단사업, 수출상담회사업, 온라인 수출마케팅사업, 열린무역관사업, 전시사업, 해외IT지원센터사업, 해외시장설명회사업, 해외시장컨설팅사업, KOTRA 글로벌브랜드, 월드캠프사업, ICT-SW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해외공공조달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인력지원(3)	글로벌인재발굴사업, 글로벌인재발굴맞춤형사업, 골드카드 사업

*** 신용보증재단(8개)**

금융(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 특례보증 2.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3. 나들가게(스마트샵) 특례보증 4.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5.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 : 희망드림론 6. 시니어창업기업 협약보증 7. 금융기관 출연부 협약보증 8.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	--

*** 한국벤처투자(4개)**

금융(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모태펀드 2. 일자리창출펀드 3. 엔젤투자매칭펀드 4.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
-------	--

*** 산업기술평가관리원(32개)**

기술(32)	<p><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주력산업) 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5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World Class 300 6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 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생활산업(구 웰빙친화적 기술개발) 8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해양레저장비 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1인용 운송수단 1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디자인기술개발 12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14 슈퍼소재 융합제품산업화 사업 15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16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17 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 18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 19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2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21 차세대중형항공기기술개발사업 22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사업 23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24 LED시스템 조명기술개발사업 25 첨단치안안전시스템연구개발사업 <p><미래부 지원사업></p> <p>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신산업)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p>
--------	--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World Class 300 프로젝트(R&D)
--	---

*** 창업진흥원(24개)**

자금 (9)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경쟁력강화,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벤처창업박람회,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
교육/ 연수 (7)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지원, 청소년비즈쿨 지원사업, 창업아카데미, YES 리더스특강,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스마트창업작터, 참살이실습터지원
창업/ 벤처 (7)	실전창업리그 슈퍼스타V, 창업맞춤형 사업, 글로벌청년창업활성화 연구원특화예비창업자육성,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온라인쇼룸몰 입점지원
정보화(1)	마케팅 플랫폼 지원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34개)**

인력지원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2.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 구축사업 3. 산업기술인력 통합정보망(Tech Force Net) 구축사업 4. 고급연구인력활용 지원사업 5. 산업융합특성화 인재양성사업
교육/연수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캐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협력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R&D (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자인 기반구축사업 2.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3. 첨단하이브리드 가공기술고도화 및 실용화사업 4. 국가기술자산 활용사업 5. 사업화연계기술 개발사업 6. 조선기자재경쟁력 강화사업 7. 신뢰성산업체 확산사업 8.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9. 녹색기술인증활성화 기반구축사업 10.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11. 소재 부품 글로벌파트너십사업 12.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13.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14.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사업 15.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6.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17.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8. 첨단메디컬신소재 개발사업 19. 탄소밸리 구축사업 20.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21.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22.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기술개발사업 23.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24.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5.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26.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27.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	--

*** 소상공인진흥원(27개)**

교육(3)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 경영학교 교육 e-러닝
자금지원 (15)	일반자금(교육/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 가안정보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특화자금(소공인, 협업화, 창조형, 장애인, 일반재해)
정보화(2)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방송
컨설팅/ 지식서비스 (5)	창업경영상담, 소상공인컨설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유망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나들가게
창업(2)	시니어 창업, 신사업육성지원

*** 시장경영진흥원(18개)**

컨설팅/지 식서비스 (5)	시장지문, 점포지도, 시장매니저 전통시장 실태조사, 시장 정비사업
교육(5)	상인 대학, 상인 대학원, 맞춤형 교육, 정보화 교육, 선진시장탐방/워크샵
마케팅(8)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특가판매, 시장투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통 통

별첨 2. 중소기업 관련법안 및 정의

1. 중소기업 지원 관련법안 소개

■ 중소기업은 헌법과 중소기업 기본법 외에 17개의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음

-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와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별법령으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법령이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 경영기반확충과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과 기술혁신 기업발굴 및 경영지도의 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과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인 조직화와 공제제도 확립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어 협동조합 조직과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운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역보호·상생협력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영역보호와 상생협력촉진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꾀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지원 계획수립과 기금의 우선적 지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는 공장설립 특례와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자본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두고 있으며 여성기업 활동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음

- 지방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제 완화와 유통산업 자원을 위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유통사업 발전법」이 있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진근거가 되는 법안 및 지원기관을 소개하면 [표 2]와 같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을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원정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 2]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분야별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살펴보고자 함

[표 2] 중소기업 지원분야 및 관련법안, 지원기관

지원분야	관련법안 현황	지원기관
금융지원	한국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판로지원 / 수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 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창업/ 벤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기술혁신(R&D)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인력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중진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컨설팅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정보화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기타(연수, 전통시장, 여성/장애인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중진공, 중소기업청

2. 중소기업의 법적 정의 및 범위

▮ 중소기업 정책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1) 기업 규모가 소정의 기준이하에야 하고, (2) 대기업에 대하여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함

▮ [표 3]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수,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중소기업의 정의하는 기준은 각 산업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각각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자산총액이 5,000억원이 넘는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
-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3]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A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 2012년 1월,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개편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①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편입하고 세부규정 마련
- ② 중소기업 인정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경과 후 1년간으로 변경
- ③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규모기준을 확대(200명, 200억원 → 300명, 300억원)
- ④ 자기자본 상한기준을 상향 조정(500억원→1,000억원)
- ⑤ 일부 업종의 소기업 범위 확대(10명→5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4개 업종)
- ⑥ 독립성 기준을 일부 강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자회사를 주식회사에서 모든 회사로 확대
*관계기업 제도에서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등
- ⑦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에 매출액·자기자본을 추가
* (현행) 상시근로자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개선) 3년 평균매출액 1천 5백억원,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기준 추가